第284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0月26日(月)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정감사 종합점검의 건
   가. 외교통상부 소관

審査된案件

1. 국정감사 종합점검의 건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2일에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환 장관님 또 통상교섭본부장님 등 10여 명의 기관증인들이 아세안+3 정상회의 수행 등의 사정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정감사는 종료됐습니다마는 오늘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서는 기관증인들 중 많은 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해에도 국정감사에 불참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여 주시고 향후 국정감사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출장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국정감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저녁 늦게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국회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불가리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청와대 공식 환영식·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를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오늘 출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감사 종합점검의 건
가.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7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종합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회의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특별하게 보고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진 그러면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국군포로 가족을 북송한 데 이어서 탈북한 고령의 국군포로를 수감하고

올해에만 기타 100여 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회 안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탈북자의 인권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 안에 참혹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비록 외형적으로 대외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4월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제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된 이후에 엄청난, 아주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인권침해를 받게 되고 제3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야만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정중히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할 것을 우려해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침묵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북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회에서 북핵 문제하고는 별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참혹한 인권침해 현상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특별단을 파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저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각 당의 간사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도 대표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박선영 위원님께서 오늘 제안을 2개를 해 주셨는데 북한인권개선특위 이것은 지금 외통위 안에 두자는 제안이신가요?

○박선영 위원 국회 안에 범국회 기구로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두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통위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만약에 국회 내에 두는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에 두자는 제안이시라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가 되겠지요?

○박선영 위원 예, 소위원회 형식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예.

그리고 11월 말~12월 초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반을 파견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역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 간사 두 당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논의를 조금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예, 비교섭 위원님들 의견도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구상찬 위원 처음 시작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한 2년 여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커다란,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있고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위원장 코멘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겁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은 우리 위원이신 진영 위원께서 IPU 부회장으로 당선되셔서 우리 위원회가 모두 축하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서 그런 코멘트 정도는 있어야…… 특히 야당의 송민순 장관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지원을 하시고 여야가 같이 큰 경사를 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는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유가 어떻든 2년 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던 문국현 위원께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문학진 위원 진영 부회장님 피선을 정중히 축하를 했었어요.

○구상찬 위원 그런데 진영 위원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문학진 위원 또 해도 좋습니다.

○구상찬 위원 두 번 축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진 구상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상찬 위원님 안 계실 때 축하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문학진 위원 자리 좀 잘 지키시지.

○위원장 박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공개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상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영 위원님께서 국제의회연맹(IPU)의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집행이사로 의정활동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세계에서 오신 많은 의원들과 교우와 친분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의원외교를 활성화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 위원님께서 IPU 부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문학진 위원 부회장이야, 부의장이야?

○위원장 박진 부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진영 위원님, 부회장이 맞습니까?

○정의화 위원 한 말씀 하시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 그래서 진영 위원님 전부 축하를 드리고,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별것도 아닌 일에 축하를 해 주셔서 하여간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명칭은 바이스 프레지던트(vice-president) 이렇게 하는데 '부회장'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신낙균 위원 이럴 때 박수치면 안 돼요?

○문학진 위원 부통령이야, 부통령.

○위원장 박진 박수는 안 치시더라도 마음은 다 똑같이 여야 간에 축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국현 위원께서 저희와 같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궐원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회 밖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활동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국정감사 종합점검의 건을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장관님, 수고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종합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꼭 제가 드려야만 될 일을 남겨 놓은 게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일문일답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DAC가 대외원조사업의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혹시 장관님 인지하고 계신지요?

성주류화라는 게 원어로는 젠더 메인스트리밍(gender mainstreaming)이라고 하는 것을 DAC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생소하신가 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DAC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공여국들과 함께 대외원조사업을 리드하게 됩니다.

그런데 DAC는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1998년 또 2007년에 제정한 성 평등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ODA사업에서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안내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주류화 전략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고 2000년 유엔이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라고 하는 거기의 주요 의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OECD-DAC 역시 세계 최빈곤 인구의

대다수가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발원조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성 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한국일보에도 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최빈곤 여성 가구가 환란 이후 최고치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빈곤 해결을 하는 데에 이 성주류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DAC가 2008년 실시한 특별동료검토 결과 한국이 ODA에서 젠더에 대한 투자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준비하고 계신 것 그게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ODA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DAC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문제에 좀더 정부로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2010년도 연수사업에서도 우리가 여성전문과정을 현재 7개에서 9개로 늘릴 예정이고 또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그 대답은 다음 질의에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기대했던 답은 KOICA에서 ODA 성주류화 사업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11월 말경에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사업, 성주류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가 문제를 본 것은 아직 ODA 성주류화를 확대할 정책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ODA의 주요사업팀의 하나였던 여성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추진과정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ODA 총액 대비 여성 대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3% 정도로 젠더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젠더에 대한 대외원조가 거의 없다가 2008년 KOICA가 7개, 지금 말씀하신 중점사업 분야 중의 하나로 환경 및 여성팀을 신설하면서 젠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시행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녹색원조팀을 신설하면서 여성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AC 가입을 앞두고 우리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해서 그 점을 국정감사 중이었더라면 제가 좀더 질의를 여기에 집중했겠지만 지금 그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일단 장관님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외교통상부가 KOICA 내에 젠더 전담팀을 신설해서 ODA의 성 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을 이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교부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OECD-DAC가 ODA의 성주류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정책과 사업의 기획·집행·결과의 전 과정을 성 인지 관점으로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성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정부는 중앙부처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2007년 2008년 ODA 사업 중의 일부인 국내초청 연수사업에 대해서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안 중에는 단 1건의 성 인지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개라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라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성 인

지 예산 또 성별영향평가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주류화 흐름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내의 정책에서도 성 평등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사업으로 할 때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사업의 심사위원이 남녀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주시면.

8대 1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부터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외교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 점도 세계 추세와 같이 가시려면 조금 더 외교부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를 1차 제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사항 해 주셔서 저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런 ODA 사업도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북송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가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구상찬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신낙균 위원님, 송민순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은 오후 1시에 열리는 소위에 참석하셔서……

거기 소위에 나와서 설명을 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동북아시아국장, 국방부의 문성묵 군비통제차장,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임옥순 국군포로 가족, 이연순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결의안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계획입니다. 오늘 소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위원 한나라당의 이춘식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을 모시고 아시아 외교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신 장관님 또 김종훈 본부장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그저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핵 폐기에 관한 의제와 장소, '평양에서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하자' 이런 문제들이 합의가 안 돼서 결렬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 '북한이 핵 폐기 의지가 없다' 또 '6자회담의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은 결렬된 것입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방적인 자세로 임한다, 언제 어디서나 남북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만을 설명드리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우리 입장이 의제는 핵 폐기 또 장소를 서울 이것은 확고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 간의 주요한 어느 회담에서나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9·19 합의문에 보면 제1항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3 또 10·3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 조항을 핵실험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9·19, 2·13 이 모든 합의문이나 선언은 무효화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참 안타깝게도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의해서 비핵화의 그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또 금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문제이고, 다만 지금 질문하신 9·19 공동성명이 폐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속 살려 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저쪽에서 이렇게 제1항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효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효 선언을 안 해도 사실상 무효다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맨 먼저 우리가 북한에 촉구해야 될 것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이냐 하는 북한의 의지를……

○이춘식 위원 아니, 준수를…… 벌써 핵실험을 1차, 2차 해서 다 파악했는데 이제 와서 준수하겠느냐 물어보는 게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북한 인권 중에서 재중국 탈북자 인권이, 세계에서 제일 인권 보장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분들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북한 이탈주민의 유엔 난민 인정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저번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대사께 '유엔이 규정한 난민에 이분들이 해당되느냐?' 하니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면 그것을 왜 그대로 놔두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당이 된다고 보고 중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유엔이 규정한 난민이 맞다는 이런 결의안을 상정하면 그것이 맞으니까 유엔회원국이 그것을 다 맞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통과를 시켜서 중국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론을 상기시켜 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유엔 대사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상정을 하겠다고. 통과는 하여튼 설득을 해 보는데 일단 상정은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유엔대표부에서 이런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면, 승인이 오면 승인해 주실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1982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사국이고, 다만 난민으로 탈북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당사국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엔 안보리나 또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과연 강제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로서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할 것을 통보해 왔고 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 원만히 처리해 왔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북한인권결의안이라든가 또 1874, 1718 이런 모든 결의안이 지금 실효성이 없잖아요. 상징성으로 하는 것이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것만 꼭 실효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말 어려운 분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유엔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유엔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도리어 우리를 무시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싫어하면 아무 일도 못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싫어한다' 하지 말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번 본회의에 꼭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 우리 우방국들도 있을 수 있고 할 테니까 일단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꼭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외교부에 관련된 한미…… 서면질의를 한 두서너 개 할 테니까 이것 좀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춘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시작하셨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남북 간에 접촉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자, 이게 큰 문제인데요.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부장관님께서는 '신문을 보고 알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봐서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장관께 말씀을 드리면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구상찬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누가 갔다' 이런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제가 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상찬 위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일성은 미 국방부차관보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청와대는 24일 날 이동관 홍보수석을 통해 이면협상이나 이면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3국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사전 준비에 대해 한번도 누가 '그렇다' 혹은 '누구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등 솔직하게 말하는 정권은 역대 정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처럼 만나자마자 쉽게 언론에 알려진 정부도 없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지는 청와대와 또 관계부처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는 물론이고 대북관계 자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미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흘러나오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우리 측 관계자가 제3국에서 통일전선부장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못한 가설들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일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를 준비해야 되는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외교부장관께서도 지금 신문을 보고 알고 있으니 이게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픈해서…… 물론 접촉은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됐다'라고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최근 미국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구멍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흘리면서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외무부장관께서 신문을 보고 아는 정도라면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이 신문보고 이렇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께서 오늘이라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치 이벤트를 한다든지 혹은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원칙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남북 정상회담을 이벤트화하

지 않겠다, 다른 정부와 다르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 정부의 남은 임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부터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협상은 비밀로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지금 구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나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신문에서 본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아는 바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부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부장관은 신문을 보고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런 정부를 국민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아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국군포로 가족들이 강제 북송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틀림없습니다, 북한 주민이라기보다. 그런데 그 자국민이 강제 북송되는 사태를 눈앞에 보고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정부가 우리 정부 말고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미묘해 가지고 어느 부처 소관인지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대책이 수립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들도 국방부와 외교부 등이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일어난 사태라고 봅니다.

'국군포로 문제 가지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은 일본인 납치, 몇 명되지 않습니다마는 납치 문제로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관계각료 전원이 위원으로 있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통일부장관에게 물었더니 '본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기구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은 범정부 대책기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로서도 매우 신중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관계부처 간에 회의기구도 있고 자주 협의를 하고 정부로서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아니, 범정부 대책 기구 구성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책 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두 번째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스스로 탈북을 해 가지고 중국 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로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당사자들이 스스로 탈북을 해서 나오는데 다시 잡혀 들어가서 강제수용소에 수용되는 비참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기 대책으로서 우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절차라는 것은 탈북을 하면 바로 선양 총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계부처 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외교부차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방부에서 국군포로 가족들을 접촉한 뒤에 상당 시일이 지나서 뒤늦게 선양 총영사관에 연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신병이 선양 총영사관으로 들어와야 중국과의 양해사항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하는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양 총영사관에 먼저 들어가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양 총영사관에 국방부와 통일부 또 기타 관계기관의—국정원도 좋습니다—직원을 파견받아 가지고 선양 총영사관에서 탈북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해서 강제북송을 막는 중심 거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선양 총영사관에 우선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보강되어야 되겠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오니까 민박을 알선해 주고 민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 공안에 잡혀 가지고 납북되는 사례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총영사관에 먼저 연락한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양해사항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않는 신변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선양 총영사관이 탈북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거기만 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파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단기대책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근본 대책으로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가를 주고라도 데려오는 이 근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겠어요. 서독 정부가 한 일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래서 프라이카우프에 의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전원 귀환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강제북송 방지 대책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미 여러 가지 그런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서독의 케이스는 저도 오래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물론 아세안 순방에서 돌아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오셨겠지만 이 문제, 직무유기입니다.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일단 중국 땅에 들어왔다가 잡혀 들어가는 것은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 문제이고 그 소관은 외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아무리 나서도 사실상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상회담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서울답방 문제가 걸려 있지만 고위급회담을 북핵 문제를 의제로 넣고 개최하면 정부가 걱정하는, 고위급회담을 꺼려하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지원만……

○위원장 박진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상천 위원 경제 지원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될 염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핵 문제가 의제로 들어 있으면 대규모 지원을 요구할 때는 같은 의제 내에서 그것과 연계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고위급회담이라도 빨리 해야 프라이카우프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무협상 갖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도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존경한다는 말만 했지 그다음에 확답은 없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아세안+3에서 혁혁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경제외교력 앞에서 전전긍긍하던 과거 정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중진국, 개도국의 의사를 대변하는 액터이자 밸런스의 역할을 자임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요.

최근에 동남아에서도 느껴지는 기류지만 지속적으로 팽창해 온 중국이 점차 오만해지고 있고, 또 일본도 외교 노선의 변화로 혼란과 조정의 시기를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그 틈새에서 우리가 외교적 도약을 가늠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아시아 FTA와 ODA를 중심으로 반드시 외교적 전략의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눈부신데요, 가는 곳마다 역시 특유의 친화력과 CEO적 감각을 통해서 정상들과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또 난제 해결의 물꼬를 트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거론된 남북정상회담도 그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채널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누구를 만났느냐는 흥미롭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물밑 접촉과 밀담인데요. 물밑 접촉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밀담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들고요. 물론 이 부분은 외교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원에 당부해야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사사건건 공개를 하기보다는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협조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피스메이커로서 동료와 친구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동기 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꼴이 나서는 안 되겠고요. 동남아, 아시아에서 거대한 외교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해결의 물꼬를 트는 남북정상회담 물밑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교부의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서 북한 핵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분 단위로 해 놓은 것이 있느냐,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답이 왔습니다. '시간 단위의 대응은 기밀이다'라는 한 페이지짜리 답변이 달랑 왔습니다.

기밀이라면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분 단위로 기록한 상세한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까? 기밀이라면 뭔가 있기는 있다는 내용의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정부 통합위기상황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들었고, 그것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비밀이라 공개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똑같은 요청을 정부 3개 관련 부처에 또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상청에 물어 봤더니 이렇게 자그마치 수십 장 되는 분초 기록을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부탁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분초당 대응 기록을 전달해 주었고, 심지어 안보상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방부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분 단위로 기록한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분 단위로 세밀하게 기록한 보고가 있고 이것을 제공해 주는데 외통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부처들보다 더 상세하고 더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공개를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유사한 기록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요청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외교부가 시간 단위로 대응을 한 기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른 부처들은 이렇게 시간 단위로 대응을 했는데 외교부는 그 기록이 없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요.

그 당시에도 미국으로부터 언제 핵실험 통보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핵실험 통보도 장관께서는 1시간 전에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국대사관은 30분 전에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어쨌든 그런 내용이나 시간은 이차적인 문제고 미국으로부터 핵실험 통보를 가장 먼저 전달받은 외교부가 이 정보를 즉각 관련 부처에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처 어느 누구도 우리 외교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접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외교적 채널로 통보를 받은 것은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위기상황에 대해서 세밀한 분 단위별 조치가 있었는지도 불투명하고 이것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는지도 불투명하고 이것이 김선일 사건의 재판입니다. 그 당시 우리 외교부가 많은 지탄을 받았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대응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문제점도 자주 지적을 했고 또 외교부에서 이번에 이것을 수정해 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기상황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체계가 도무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들에 물었어요.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왜 늦었느냐', '시간 대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정보인데 사전 정보가 될 어떠한 실마리도 우리가 입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렇게 실마리가 될 만한 정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제공했어야 되고 그랬으면 우리의 대응이 훨씬 빨라지고 효과적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고요. 장관께서 계시는 동안에 위기대응체계 철저하게 점검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단독으로 질의할 테니까 직설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접촉이 있었다라고 연일 대서특필 보도를 하고 이 기사의 취재원을 정부당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홍보수석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접촉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NC-ND로, 즉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부 입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상회담을 위한 싱가포르에서의 최근의 남북 관계자의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진행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드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동안에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여러 번 밝히셨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은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지요? 이것이 변함없는 정부의 입장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언론에 지금 보도된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정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당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외교부의 본연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 보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나는 모른다, 모르는 내용이다 하는 것은 마치 이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 아니고 남의 나라 정상회담이거나 아니면 외교장관으로서 강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주무장관을 제치는 왕따를 당하거나 또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번에 아세안+3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수행했고 청와대 참모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입장 조율도 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회에 나와서 '모른다, 모른다' 고장난 유성기처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정부 내에서도 업무분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외교부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확인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외교부 권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관계되어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관계 부처가 있고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그러면 관계 부처가 어디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시다시피 통일부장관이 되겠지요.

○박주선 위원 통일부장관도 모른다, 외교부장관도 모른다, 그럼 언론에서 발표한 정부 당국자는 유령입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도 모르고 외교부장관도 모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궁하는 위원도 몰라야 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과 합당한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하다, 않다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관계되는 장관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처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연관된 입장에서 외교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주무부처가 통일부고 그럼 외교부는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관계되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간에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확인하거나 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박주선 위원 참 답답한 일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8개월 동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이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판명이 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지금 급진전되어 가지고 임박한 상황에서 뭔가 한국 정부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 주기는 보여 줘야 되겠다 하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건주의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개와 투명을 강조해 온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아주 제한된 비선조직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계산과 고려를 담은 이명박표 제2 신북풍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거기에,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면 장소가 이제는 평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양을 우리 원수가 두 번이나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 와서 또는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장소가, 평양을 우리 국가원수가 세 번이나 가는 것이 의전 면에서 부담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 한다면 소위 말하는 판문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금강산 상시면회소가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만남을 위한 만남의 형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하시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라는 것은 회담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또 동의를 받아내고 그래 가지고 협상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지 북핵 문제의 진전이라는 것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협상의 방식에 있어서 논리적인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면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참고를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평가를 하든지 동

의를 하든지 아니면 틀렸다든지 말씀을 해 달라는데 참고는 어디다 참고를 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문제는 북한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남북대화에서 북한 핵문제 자체를 의제로 놓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만남을 위한 만남 그리고 원칙 없는 만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정상회담의 만남이라는 것이 무슨 원칙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로의 불신을 해소를 하고 진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상의 이해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만남을 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원칙 없는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만남의 원칙이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만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큰 행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적인 면에서, 언급했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선 위원 원칙 없는 만남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수한다고 그러는데 원칙 있는 만남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이 구체적으로 직접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걸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핵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어떤 행사성의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장관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유세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밀 접촉이나 밀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의제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비밀을 요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미 공개가 된 입장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국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국민을 상대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체 모른다 모른다 해 버리면 결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면거래나 또는 이면 딜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장관도 모르고 통일장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개적이고 또는 투명성 있게 추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외교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진전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장관님,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국 합참의장 멀린이지요?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로 파병을 보내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송민순 위원 신문에서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군의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을 다른 데로 파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을 정도면 한미 간에 외교장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당국 선에서 의견이 있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아직까지 주한미군 병력의 역외배치 문제는 지난번 SCM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송민순 위원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위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리 논의가 됐어야 될, 한미 간에 논의가 된 다음에 언론에 나와야지 미국이 먼저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뒤따라가는, 뭔가 이렇게 찾아가 보는 사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뭔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뭐냐, 한미동맹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협상을 할 때 주한미군이 축소가 되면 우리 분담 규모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여야 위원들 간에 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중동 지역으로 파병하는 문제와 한국의 중동 지역에서의 역할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같이 해서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게 괜히 또 여러 가지 국론분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전적인 문제는 좀 말씀을 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지난 11일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하고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국내외적 지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질문하시는 게 좌석배치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송민순 위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미 설명이 있었을 걸로……

○송민순 위원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정부 수반이지요? 소위 헤드 오브 가버먼트(head of government).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송민순 위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head of state)……

○송민순 위원 그렇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다르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국가원수로서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것이, 물론 현실 외교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관님을 위시한 실무자들이 그런 점을 좀 확실히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국내외적 지위가 다르다 하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측에도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G20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아주 잘된 일이고 외교장관님을 포함한 각료들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G20 체제가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G20, 특히 G20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7·G8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나 관행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국의 주요 지역의 일선 외교관 배치에 있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지금 중국 러시아까지도 정치적 임명인 공관장을 임명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G20 국가 특히 G7 국가에서 자기 나라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나라의 주요 국가의 대사를 이렇게 정치 임명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은 정치인을 주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송민순 위원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하고 비슷한 작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자기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의 대사를 정치적인 임명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게 좀 반반 섞이는 것 같습니다.

○송민순 위원 반반이 아니지요. 거의 없지요. 그건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청와대 눈치보고 그런 것도 여기 와서, 제가 일부러 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자꾸 '반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좀 분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키운 외교관들 대사 한 번 시키고 다 이렇게 목 잘라서 내보내고 그

렇게 해서 어떻게 국제사회 나가서 경쟁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G20 얘기하시는데 지금 해외 나가서 환율이 좀 바뀌면, 장관님, 환율이 오르고 이러면 공관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 집값이 없어서 집값을 몇 달을 체불을 해요. 그리고 계획된 행사도 우리가 환율이 올라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행사도 취소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G20 국가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 환율 좀 바뀌면 돈이 없어서 집값도 못 주는 나라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정부 내에서 얼마든지 각료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나라 체면에 맞게 좀 해 주시고 말만 국내에서 G20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실을 좀 키워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은 취지에서 예산 좀 모자란다고 영사관이나 공관이 없는 곳에, 86군데인가 영사협력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 모자란다고 그 영사협력원들을 다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1년에 1200만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돈 1년에 10억도 안 들어요. 10억이면 여기 K-55 자주포 1대 값입니다, 대포 1대 값. 그걸 가지고 86군데의 영사협력원 중에서 우리의 영사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참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영을 하십시오, 반영.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송 위원님께서 외교부 살림 내용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저로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송 위원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송민순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과 간부들이 그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돈 10억을 가지고 86개의 주요 도시에 영사협력원을 둬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객이 사고 났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소위 퍼스트 에이드(first aid) 아닙니까? 응급 영사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SCM, 한미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 이런 것 만들 때 외교부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미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 보니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던데 잘 아시다시피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3분, 4분, 5분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은 없어요. 지금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북한이 실험한 KN-0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사일 같은 것은 남쪽에 날아오는데 3분, 4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이런 걸 갖다가, 한미연례안보회의를 명시적으로 할 때는 이것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하고 특히 지금 핵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은 오른쪽으로 가고 손은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언급된 확장억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미사일 체계는 미국 자체의 미사일 체계를 언급한 거지 한미 간에 어떠어떠한 공동적인 MD 체계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토론하시기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좀……

금년에 말이죠. 그래서 영사협력원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또 재외공관 그런 걸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원을 대폭 증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신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외통위 심의 때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 오늘 남북 정상 회담 관련해 가

지고 질의들이 많은데, 사실은 주무부서가 외교부는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통일부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특별히 '왜'라고 설명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글쎄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 동·서독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도프 장관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겐셔가 외무부장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유는 동·서독의 경우는 분명하게 동·서독 문제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적인 성격은 갖지 않지만 핵 문제나 해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그러지 않나,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외교부장관께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으로 계시죠?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기적으로 매주 1회……

○권영세 위원 매주 열립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수시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열리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어쨌든 신문 보고 아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남북 정상 회담 관련해서는 이게 한 번도 안 열린 모양이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합의가 되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뭐 어떤 단계, 모든 단계에 다 관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위원 어쨌든 제 질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상에서 논의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아까 남북 정상 회담의 투명성을 얘기했는데 다른 정상 회담도 그렇고 남북 정상 회담도 그렇고 투명성도 좋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반드시 그게 투명으로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맞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제 공식 의제로 실무조정회의에서 채택이 돼서 장관급 조정회의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세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그것이 제가 조정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위원 어쨌든 다룬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최근에, 어제인가요? 북·미 접촉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세하게, 미국으로부터 디브리프를 받거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의제가 주로 어떤 것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미국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제의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초청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이고 그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그렇게 미국 국무성도 설명을 해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즈워스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실무 접촉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상의를,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 정부 입장을 제가 공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성이 이미 밝힌 대로 6자회담을 전제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해서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점으로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북한은 보즈워스가 방북하게 될 경우에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이슈들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겠지만 북한 핵 문제는 미·북 양자 접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또 그래서 6자회담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보즈워스가 방북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으로서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주장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수차에 밝힌 바가 있고 미·북 접촉은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킴으로써 앞으로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룩하자 하는 목적에 국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북한이 지금 소위 뉴욕 채널이라든가 거기에 뭐 최근에 보니까 한성렬이 다시 부대사로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리 근 보내 가지고 완전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를 미·북 간 양자 간의 문제라는 점을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6자회담 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무용화·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다 이 말씀이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현재까지는 북한은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그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지난주에 북경 공항에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원동연 아태위원회 실장이 TV 카메라에 노출이 됐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상징이 없는 일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외교장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 천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과연 외통부장관다우신 답변이십니다. 그런 답변이 다른 외교 활동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결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무심코 한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큰 의도를 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언론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거지요. 말하자면 쇼를 한 겁니다, 쇼를.

그런데 왜 쇼를 했을까요? 남북 접촉설을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남남 갈등이 부수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야 더할 나위 없는 소득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발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외통부장관의 인격을 믿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통일부장관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두 분의 두 장관의 인격을 믿고 싶은 저로서는 1993년 그리고 1995년, DJ정부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때도 통일부도 몰랐고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정원도 몰랐고 심지어 청와대의 안보수석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인공기가 게양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잃었던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에 지금 옥수수도 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도 우리 외통부는 전혀 배제되고 모르는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옥수수는 아마 적십자사에서 지난번 남북 이산가족……

○박선영 위원 사전에 아셨느냐 모르셨느냐만을 묻는 겁니다.

사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문제는 더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거는 정부 간에 협의가 있었고 그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 회담에 대

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시는 바가 전혀 없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저는 거짓 증언을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도 100% 제외되고 있고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도 제외된 채 비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우위를 주장하실 수 있는 정권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비선 동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추수철입니다. 이때에 식량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외교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옥수수 지원은 오래 전부터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했던 건데 북한이 받아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박선영 위원 확약을 했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받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면 그것은 군축으로밖에 안 갑니다.

아니 추수철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색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옥수수……

○박선영 위원 제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하면 군축용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양의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교장관으로서 사모아 섬 등 태평양에 있었던 해일 피해국에 지원하자고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왜 통 크게 지원을 그런 데에는 못하십니까?

올해만도 28만t이 더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총 82만t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도덕적 우위성도 전 세계 외교가에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외교장관이 나서서 해일 피해 지역이라든지 피해 나라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현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선영 위원 현금 지원 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물, 쌀 지원은 아마 국제적인 미곡 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절차가 어렵더라도 나서서 주장을 좀 하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덕적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미국 국방장관 방한 때 미국이 우리 한국의 공병대를 아프간에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박선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프간의 34개 주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바그람에 소규모의 P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우리가 내년에 G20 국가의 의장국이 되고 또 OECD 국가고 하기 때문에 아프간 지원의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프간 지원, 원조가 지금 우리는 0.17%입니다. 인도가 2.1%고요. 일본이 3.3%,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이란도 2.04%입니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아프간 원조가 0.1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가 하나도 없죠? 미군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미국에 더부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미군의 앞잡이'라고 해도 우리는 사실 끙끙 앓고 있는 속앓이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더 당당하게 세계 경제 대국의 하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미군 부대 안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늘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당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아프간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금년 2월에 차관

보를 중심으로 한 정부실사단이 아프간을 시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 직업훈련, 경찰훈련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아프간 재건을 위한 것이 하나의 아프간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인원을 최대한 130명 정도 민간 전문 인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군이 우리의 그런 인원이 확대될 경우에 경비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비를 하는 문제도 부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경비를 하는 것이 경찰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경비를 위한 병력이 필요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조만간협의를 해서 국회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영 위원 유엔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유엔에서 지난 10월 8일에 안보리 결의 1890호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 증진을 위해서 지원단을 증가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지속하자고 결의안을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억지로 목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지원을 하지 마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파병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터이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와 그리고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그리고 재건사업을 도울 수 있는 그 PRT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세계 경제 10위권에 걸맞은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당당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체 PRT를 보호할 수 있는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걸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부살이 하지 마시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PR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향후에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방재건팀은 의료 PRT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지요. PRT, 의료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경찰훈련이라든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또 지금 PRT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삼환기업의 도로건설이 일부는 완공이 되었고 또 계속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변 중에 전투 병력은 아니지만 이 130명의 우리 민간 전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파병 등 다양한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이 PRT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PRT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42개, OECD 국가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이 PRT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 나라에서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을 파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이 전투를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지역이라면 그런 저게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경비 목적으로 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전 세계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다국적군, 전투병이 되었든 아니면 PRT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든 간에 지금 파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4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NA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지금 파병에 참여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맨데이트(mandate)를 받아 가지고 파병을 하고 있고요. 나라 수로는 이것이 42개국 정도 됩니다. 그걸 확실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미 지적이 나왔듯이 지금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이 '지금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를 중동 내에 배치할 수도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던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사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전략적 고려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외교부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프간의 재건지원은 존경하는 정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써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글로벌 코리아로서 선진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또 우리가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는 그러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점은 결코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왔고 또 그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프간 상황은 지난 2003년 이후의 이라크 상황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또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에 아주 큰 상징성을 갖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신아시아 외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내년에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좀 더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wm워스 특사의 방북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장관께서는 말씀이지요. 이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열린다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의제를 뭐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의제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동성명에는 간단히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도 지난 2007년 공동성명 4조의 선언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된 것은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외에도 4자 내지는 3자 정상들의 평화체제 얘기도 잠시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공동성명 또는 선언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실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鄭玉任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북한이 북·미 실무접촉에서 6자회담보다는 양자 구도로 가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한 북한의 주장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미·북 간의 문제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어떤 레벨, 어떤 대화든 간에 우리가 좀 진실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를 갖고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공감대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미국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공개적 또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여러 번 그런 다짐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요한 의제로 핵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명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만약에 열린다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되리라 보여지는데, 아마 2000년 정상회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해 가을에 조명록 차수의 방미가 이어졌고 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한미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있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초청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생경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미 간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서 일련의 삐꺽거림이 있다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간의 그런 대북 문제 공조에 있어서 제가 직접, 주무장관이 그런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로서는 하등의 그런 문제가 없고 긴밀히 유지되고 있고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정의화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동아시아 공동체, 나아가서는 우리 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캄보디아 국빈 방문에 이어서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의 전 일정을 아주 성공리에 수행한 우리 유명환 장관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에 수행하시면서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 관련해 어느 정도로 저는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오늘 국민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아시아 외교에 있어서의 상당한 중점은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서 이번에 우리와 가장 경제적인 관계가 밀접한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이어서 태국에서도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 정상 간에 같이 모여 가지고 지난 6월 제주도에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에 관해서 논의함으로써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좀 더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한 가지인데, 이웃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먼 이웃, 먼 나라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신아시아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정의화 위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지금 최대 현안으로 부상은 했는데 정부에서 다소 좀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 통일 문제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6자 중에서 남북한을 뺀 4자의 경우에는 통일 문제보다는, 북핵 폐기, 한반도의 비핵화 이건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목표지만 통일에 대한 목표는 우리가 가장 강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두지휘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에 있었던 일을…… 뭐 2년은 안 됩니다만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 보면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선 그것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을 통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그리고 접촉면을 적십자 회담이건 NGO 회담이건 모든 접촉면을 가능한 한 넓혀서 남북 간에 신뢰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그랜드 바겐에 대한 논의를 해 가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이벤트성, 단발성, 일회성 이러한 회담이 아니라 정말 워킹 비지트(working visit)와 같이 그렇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야 당연히 우선 남한을 답방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판문점이나 금강산이나 어디건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외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그날 장관께서 안 계셔서 신 차관에게 네 가지를, 21세기 외교 체계를 위해서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제대로 가지려고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저는 늦다고 생각하는데요……외교력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읽어보면요.

향후 10년간 외교 인력 2배 확대 그리고 예산 1.5%는 가능한 한 빨리 보장을 해야 되겠고요. 전 수교국에 최소한 1인 이상의 공관을 확충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외무고시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그리고 외교아카데미 채용을 전면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지금 다른, 옛날에 세무대학도 있었고 경찰대학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결국 5 대 5로 하면 세월이 지나면 내부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통일외교안보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외교안보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에 또는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에도 싱크탱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거 완전히 장난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민간 싱크탱크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야기입니다만 정진석 위원님께서 장관님 안 계실 때 질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중일, 특히 부산·후쿠오카·상해를 잇는 2020년 올림픽 개최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의를 듣고 나서 제가 IOC 정관을 보니까 1개 도시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1개국에서. 그래서 정관을 개정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우선 저는 올림픽도 세계가 바뀌었으니까 올림픽이 세계평화와 세계의, 세계인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한국에서 하면서 2020년에 부산·후쿠오카·상하이, 안 되면 최대한 부산·후쿠오카라도 공동 주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를 외교부에서 만들었던데 저는 이게 대통령 직속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기재부, 지경부 그리고 청와대의 관련 중요 핵심 보직자들이 같이 강화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움직일 때에 이것이 제대로 힘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성과

물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잘 경청했고요.

특히 올림픽 개최 문제 아주 매우 흥미로운 제안으로서 한번 관계부처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교 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로서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씀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G20 금융정상회의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내년 11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1월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11월 하순으로요.

○정의화 위원 하순경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의화 위원 그래서 문제는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런 장소 문제가 생길 텐데요.

제가 그동안의 트레이스(trace)를 죽 해보니까 피츠버그 또 그 앞에 캐나다의 경우에도 소도시에서 하고 했던데 지금 여러 가지 공항 문제나 호텔 문제나 접근성, 경호 문제나 따지고 보면 저는 서울 아니면 부산이라고 봅니다만 꼭 부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이 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비수도권 중심 도시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이제는 서울이 아닌 제2의 도시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APEC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발로 해서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항 문제라든지를 따져 보니까 저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그 문제도 정부의 정책 검토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마지막 순서로 정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유명환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국력 신장에 따라서 외교적인 위상도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년에 G20 정상회의가 11월이면 한중일 정상회담은 언제쯤으로 예정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마는 아마 6월 초순 아니면 5월 하순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정동영 위원 내년 상반기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신각수 차관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년 한중일 정상회담에 저는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으로 후쿠오카, 베이징 그다음에 한국 한 바퀴가 돌게 되는데 이게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그다음에 중국 총리 이렇게 굳어지면 이게 10년 20년 앞으로 죽 가게 될 텐데 이러면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지요.

물론 이게 ASEAN+3에서 파생돼서 99년부터 10년을 왔고 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따로 독립된 것은 내년이 3년째입니다만 유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명실상부하게 헤드 오브 스테이트(Head of state), 헤드 오브 거버먼트(Head of goverment) 모임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국회라든지 여론을 뒤에 다 업고 적극적으로 좀 제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의 권력구조하고 내부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중국에서의 ASEAN 문제, APEC은 후진타오가 참석을 합니다, G20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ASEAN 관련된 문제 또 한중일은 원자바오 수상하고……

○정동영 위원 거기까지는 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권력 내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헤드 오브 스테이트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헤드 오브 거버먼트, 정부 수반의 모임으로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하고……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ASEAN+3에서 할 때

는 거기에 참석차 가서 별도의 모임을 할 때와 한중일 정상회담, 그렇다면 한중일 경제정상회담으로 한다면 혹시 중국의 그런 집단지도 체제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 되겠지만 명칭은 한중일 정상회담인데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인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EAFTA, 동아시아 FTA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일본은 세피아입니까, CEPEA?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그래서 인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전략인데 우리가 길게 봐서 지금 인도가 12억 인구에다가 원자력의 능력 또 IT 능력, 우주항공의 능력 또 전략적 가치 이런 걸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4강 외교의 틀 속에서 죽 국가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만 인도까지를 포괄하는 5강 외교의 전략을 고심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세피아, CEPEA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사실 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상당히 개방된 입장으로서 EAFTA하고 CEPEA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상당히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그런 제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그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난 10여 년 인도의 비중은 아주 급속히 커졌는데 우리 외교 역량은 거기에, 외교 역량의 집중은 그에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공관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그렇고 또 지난 10년 사이에 커진 우리 기업들의 활약상과 견주어서도 총영사관의 증설 문제라든지 또 대인도 방문 외교에 대한 비중 격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하고 지난 8월에 CEPA 협정,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이번 회기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도록 정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번에 상임위 통과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평양에 갔는데 민간 차원의 접촉이기는 합니다만 북쪽의 박의춘 외무장관 또 김계관 부상과 접촉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레이엄 목사가 '푸에블로호를 돌려주면 미·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계관 부상의 답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온다면 협상이 가능하다, 힐러리가 와서 요구하면 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기에 참석했던 린튼 목사가 전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 외교부 차원까지 그 문제가, 제 선까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흥미로운 제안이고요. 미·북 관계가 핵 문제의 진전이 있으면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의 노력도 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나의 재미난 구상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한이 오히려 거꾸로 가기 때문에 미·북 관계에 있어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그 문제가 공식적인 논의로 올라오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위원 발상을 좀 바꿔보면요. '핵 문제 진전이 되면'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풀림으로써 이게 병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레이엄 목사의 비중으로 볼 때 미국 정부의 입장을 꼭 대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 국민의 여론, 미 국민 여론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대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자 2명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에서 북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도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맥락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역할을, 구경꾼이 아니라 뭔가 좀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유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하여튼 항상 한반도의 긴장완화 또 대화 이것은 정부로서도 변함없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안도 염두에 두고 기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까?

1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의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장관님, 91년 걸프전 때 우리 정부가 돈 얼마 지원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때 물자, 현금 합해가지고 5억 불……

○송영선 위원 5억 불 정도입니다.

일본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50억 불 정도……

○송영선 위원 130억 불, 140억 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죄송합니다.

○송영선 위원 전비의 15%를 냈습니다. 전비의 15%를 냈는데 걸프전 후에 1992년 4월 25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전면에 31개 전쟁 지원국에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그러나 미국은 일본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의 전비를 댔지만 병력 파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간 문제, 우리 선택은 제가 볼 때……

정부입장 정해졌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검토를 죽 해 왔습니다.

○송영선 위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검토하신 지가 1년도 넘지요. 작년 8월 정상회담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은 그런 낌새가 충분히 있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선택은 제가 볼 때 주한미군을 아프간으로 보내주느냐 아니면 주한미군을 붙들고 우리 병력을 파병하느냐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대안이 또 하나 있지요. 현금지원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현금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70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금지원이 아니라 물자지원입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이 20억 불 한다 또 이란이 5억 불 한다. 우리가 91년에도 5억 불 한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턱없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춰진 저의 이미지 자체가 깡보수라서 무조건 병력을 파병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은 2007년 GPR, 소위 글로벌 디펜스 포스쳐 리뷰(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해외주둔 파병에 대한 전략을 바꿔서 붙박이식 미군배치는 더 이상 않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유일하게 붙박이식입니다.

아프간에 지금 6만 5000명이 파병돼 있지만, 물론 오바마의 전략에 따라서 이것을 4만 정도 더 확대를 할 것인가, 대탈레반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알카에다 중심의 한정된 테러전쟁이냐에 따라서 병력 파병규모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에 7000만 불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파병이라는 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은 불가피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전투병 파병을 일체 검토한 적도 없고……

○송영선 위원 아니, 전투병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병력 파병……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PRT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인원을 군으로 할 것인지, 경찰로 할 것인지 또 민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경비인원을 민간으로 한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장관님으로서 경비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지역에, 물론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아니지만 가

까운 지역에서 국경을 지키거나 아니면 국경을 이탈…… 무방비하게 놔둔 이 상태를 경비하고 우리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보내면 정말 프로페셔널을 보내야 되는 것다 아십니다. 민간인으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고.

경비병이라는 것이 결국 군병력입니다. 경찰병력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그런 장소에서 경비에 트레인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립서비스거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민간 전문인만 가면 군은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착시적인 견해를 자꾸 던지시는데 민간 전문인이 갈수록 경비병은 필수적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이라크 복구사업하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많이 따 놓았는데도 못 뛰어들어가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방부 측에서 적극적인 경비병을 안 대줍니다.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가 얼마…… 지금 조양건설 같은 데 얼마를 따 놨어요? 22조짜리 프로젝트를 따 놨는데 못 가고 있어요. 경비병이 없으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이제 땜질식의,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전쟁터 혹은 위험 지역에 자기 나라 국민을 보내는데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내겠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거기 보내겠다는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용기를 내서 국민들하고 정면충돌이 되더라도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지금 꼴이 뭐냐? 정말 꼴이 뭐냐? 만날 내 포켓에 돈이 많다, 나는 부자다 해 놓고 막상 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밥값 안 내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폼만 잡고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빠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엔에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갖고 싶은데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필요하면 헌법조항 대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칸트러뷰션(contribution)하지만 자기들 병력은 한계가 있다, 물자지원만 한다, 우리도 그것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적정한 선에서 자꾸 조절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국회와 아주 밀접하게 상의하고 협력을 구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나서 가지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통상부가 적정한 선에서 해 가지고 국회만 동의하면 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결국 이것은 땜질식밖에,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됩니다.

이 전략은 국방부의 전략이 아닙니다. 대외적인 외교전략, 국력에 대한 적정수준의 국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야반도주하는 그런, PKO식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가서…… 보낼 때의 반대보다 가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더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지난 2월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종결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부적인 방침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지금 주한미군 보병사단이 나가면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을 가든 이란을 가든 리비아를 가든 쓰일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보병사단 보내 봐야 미국 본토에 배치될 데가 없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2012년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전략하고 매칭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남북정상회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설, 사실이 아닌 거지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단 통일부장관이, 관계 장관이 그 문제를 거기에 따라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일반적인 의제로 제 생각으로는 우선 북한 핵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외교통상부의 수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후에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한……

○윤상현 위원 장관님, 그러면 청와대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야 노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소통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접촉에 대해서 일절 함구하고 있다가 추가접촉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장관님께서 사정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남북대화에 지금 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2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따른 5자 간의 대북제재를 좀 흐트러뜨리려는 저의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대화도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북·일 간의 대화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각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역량을 분산시켜서 갈팡질팡하게끔 유도해서 대북제재 국면을 누그러뜨리려는 전술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안심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남북 간 비밀접촉설에 대해서 일단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부인을 안 하는 상황하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일상적인 남북 간의 비밀접촉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남북한 간에 서로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고, 개진하다 보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북측에서 운을 떼지 않겠습니까? 전술적인 미끼로 던지려고 하겠지요. 저는 이게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남북한 비밀접촉에 있어서 남한 측의 접촉창구는 C목사이고 북한 측의 접촉창구는 김정은의 인척이 되는 K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권력 실세가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모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전갈을 전해 온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도 남북 간에 비밀접촉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실장님하고 아태평화위의 송호경 부위원장의 비밀접촉이 있었고 그게 또 정상회담으로까지 갔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을 비밀리에 방북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그 비밀접촉한 게 이렇게 전부 언론에 알려지고 공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나이브(naive)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어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 입장에서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밀접촉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을 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1971년 7월달에 파키스탄 방문 도중에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북경으로 날아가서 주은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 2월달에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상해공동성명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특별보좌관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최고의 태두입니다. 그런데도 이 헨리 키신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과외교습을 받습니다, 중국 전문가들한테. 과외교습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정보를 전부 함구한 채 들어가서 그런 접촉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보관계장관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장관님께서 대북 밀사의 자격은 적어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알고 한반도 국제 정세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정보를 함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꼭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6·15선언 6항인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있는데 이 장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도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 답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그리고 의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핵 폐기 또 재래식 병력 감축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또 남북경협 문제 이런 게 의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성 김 북핵특사하고 북한의 리근 미국국장의 접촉이 있었는데 그 접촉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설명을 받았습니다.

○윤상현 위원 받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북측에서 분명히 조건을 내걸을 텐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내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발표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미·북 접촉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북측에 설명을 했고 북측은 그것을 주로 경청하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북·미 간에 접촉을 하다 보면 북한에서 반드시 조건을 내걸 겁니다. 결국에는 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어떤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염려스럽다라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 스스로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바마 정권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은 지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장관님 피곤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국회 나오시기 전에 현인택 통일부장관 만나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침에 일찍 오는 바람에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면 귀국하셔 가지고 어젯밤에 전화통화 하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어젯밤 11시, 늦게 돌아와 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학진 위원 ‘국회 나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로 똑같이 답변을 하기로 짜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인택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문학진 위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학진 위원 너무 답변이 똑같으셔서 두 분이 짠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북한을 옵서버 자격으로 해서 G20 정상회의에 초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유의 보도도 나왔거든요. 아시는 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윤증현 기재부장관을 코우트(quote) 해 가지고 언론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 자체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지금 각종 보도 또는, 청와대 핵

심 관계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보도진에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캄보디아에서 엊그제 이 보도진한테 확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대한민국 외교안보라인의 말하자면 수장이시잖아요. 보스잖아요, 보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뭐…… 외교적인 문제까지 올라오면 저희가 이걸 안보조정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요.

○문학진 위원 그런데 보스가 모르게 애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보고도 안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이라는 게 다 절차가 있으니까요. 제가 현재 모른다……

○문학진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뭔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통일부장관도 '전혀 아는 바 없다', 외통부장관도 '전혀 아는 바 없다', 청와대의 어떤 핵심 관계자는 그런 접촉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보도진에 확인을 해 줬고 그렇다면 비선라인에서 북쪽과 접촉을 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는 NGO들이 많이, 지금 항상 연락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선라인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설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은 남북 대화 추진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투명하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비선라인이 지금 어떤 라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아까 청와대의 누가 확인을 해 줬다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알고 있지를……

○문학진 위원 캄보디아에 같이 계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데 그런 점을 확인해 주는데……

○문학진 위원 그런데 그 핵심 관계자한테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문학진 위원 확인해 준 바가 없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러면 기자들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닐 텐데.

어쨌든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그 특성상 초동단계에서 비선라인이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첫째 조금 전에 윤상현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보안 유지가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초동단계의 접촉을 누군가 우리 내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다가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이렇게 흘리고 하는 게 아니라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첫째 언론에 지금 별놈의 얘기가 다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이제부터는 공식라인을 통해서 이거 당당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둘째, 이게 싱가포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낯선 항구에 가서 접촉할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서로 특사를 보내서—왜 우리 땅 놔두고 먼 데 가서 해요?—남북을 왕래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남북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이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김정일 위원장이 광폭정치 한다고 그랬나요?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통 크지 않나요? 양쪽의 정상이 만나면 나는 통하는 구석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이 한반도가 지금 안

고 있는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견해를 짧게 듣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각종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당국자 또는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익명으로 쿼테이션(quotation)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게 익명으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몸이 달아 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매달리고 있다,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전혀 적절치 않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장소 문제를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는 형식으로 해서 꼭 서울에 와야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6·15선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저는 너무 그런 데 얽매이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열어놓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 때문에……

지금 통일부장관도 그렇고 외교통상부장관도 그렇고 '이거 전혀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을 책임져야 하는 통일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소외되고 배제된 채 일이 추진돼서 막상 일이 벌어지면, 이걸 실제로 시행하고 책임져야 할 이런 장들이 말이야, 장관들이 그렇게 소외되면 막상 그런 국면이 벌어졌을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니까 절대 왕따 당하지 마시고요. 확인도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통상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국감을 가 봤더니 인도가 인구나 국토의 면적도 크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시아 통상외교 또 나아가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아프리카·중동 통상외교의 기점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또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CEPA를 지난 9월 말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되지 않았고 이게 11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좀 늦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저도 전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도가 아주 중요한 나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 9월에 외통위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인도 간에 합의된 내용은 양측 간에 국내 비준절차를 끝내고 60일이 지난 뒤에 발효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10월 말 전에는 처리가 돼야 내년 1월 1일에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굉장히 촉박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거기에 하나 부가적인 합의로 별도로 정한 날짜에 서로 합의만 있다면 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번 본회의에서 꼭 좀 통과가 되면 무난히 내년 1월 1일에 기해서 발효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이 꼭 되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그냥 두세 달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늦어지는 그런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한다 이렇게 하면, 연내에 발효가 되면 발효될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1월 1일 날 또 하고 다음 1월 1일 날 또 하고 하면서 3년이 다 찹니다. 그런데 인도의 사정이 연내 중간에 한 번 발효가 되면 1월 1일 날 또 하는, 그래서 1년에 실제로 두 번을 관세를 절감하는, 관세를 삭감하는 그런 것이 국내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 또 인도의 현재까지 개방도로 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일자와 첫 번째 관세 감축하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월 1일 날 발효가 되도록 양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김충환 위원 며칠 차이 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1일을 놓치게 되면 결국 내년 1월 1일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보다 앞서 가지고 하는 그런 선진의 효과가, 1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김충환 위원 어쨌든 인도의 특히 가전 분야, LG·삼성 분야는 아주 거의 50% 이상 현재 지배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거의 외국 자동차 중에서 한국 자동차가 제일 비중 있게 또 시장을 넓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을 며칠 늦게 해 가지고 1년을 또 잃어버린다든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큰 국제무역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통상본부장께서 여야 의원들에게 좀더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대 중국 외교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 외교부로서도 이 문제를 항상 가장 큰 관심의 하나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또 중국하고 여러 가지 양자협의 때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문제를 거론했고, 또……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의 우리 공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여럿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중국 정부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전 국민 관심사이니 만큼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특히 탈북자,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입국이, 현재 비자가 안 나온다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 문제는 지금 일반 탈북자하고 국군포로는 전혀 성격을 구분해서 국군포로는 원래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납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국군포로 및 가족들은 우리가 송환시키는 데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온 다음에 여행을 중국으로 가고 싶을 때 비자가 현재 안 나온다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우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현재 우선 탈북해 있는 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최근에 모렐…… 그분이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 모렐이 말하기를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오바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라크보다는 아프간의 테러와의 전쟁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속에서 아프간 정세가 빨리빨리 호전될 그런 기미가 없기 때

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도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해 가지고 모든 전투는 미국이 전념을 하고 그다음에 재건을 지원하는, 이게 전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민간인들의 생활여건의 향상이라든가 또 어떤 지방행정체제 이런 것을 바로잡는데 모든 우방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일반론 쪽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금년도 우리 지원계획은 1200만 불로 현재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좀 더 됩니다. 우리가 아프간에 새로 한 게 2011년까지 3300만 불을 추가로 서약을 했고 전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합해서 한 9000만 불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G20 국가의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또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이런 걸 감안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적 발언이 액수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금액이라는 것보다는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물적·인적·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재건 지원의 사업 규모가 3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인원을 파견하는 문제, 우리 자체적으로 경비를 담당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죽 해 왔고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리 정부부처 내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곧 당정협의뿐만 아니고 외통위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외통부장관님, 어젯밤에 귀국해 가지고 귀국하시자마자 또 여기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문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외무성 미주국장 리 근 국장이 미국을 방문 중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제 성 김 미 국무부의 6자회담 대표 특사가 같이 만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회담에 대한 실무 접촉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양자회담, 실무회담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저께 토요일 뉴욕 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성 김 특사하고 1시간여에 걸쳐서 접촉을 했고요. 그 논의의 주제는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는 문제, 또 북한이 주장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주로 미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본국에 보고하는 이런 회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黃震夏 委員 지금 어쨌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미·북 간에 양자 접촉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사전·사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정부가 북·미 양자대화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건 중에는 북핵 문제를 반드시 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일종의 기대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이 우리 측에 설명을 해 온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지금 특히 제 걱정은 북·미 양자회담이 되지만 그것이 진전이 있어서 북핵 문제를 확실히 다룰 수 있는 6자회담으로 복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에서 계속 미국과의 공조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이 차제에 여쭤 볼 것은

지금 6자회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본은 과연 새로운 정부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6자회담에서 자꾸 납치자 문제를 그들의 조건으로 내세울 것인지 아닌지, 이번에 제가 일본 국정감사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외교부의 판단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일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6자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다 6자회담의 한 프로세스로서 이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토야마 신정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대북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의견의 일치를 가져 보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 중국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안 1874호가 계속 제재조치를 취하는 그런 데도 중국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자꾸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한국·미국·일본뿐만 아니고 중국도 우리가 얘기하는 투 트랙 어프로치(two track approach), 북한이 단지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만 해서 제재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증명할 만한 그런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도 다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투 트랙 어프로치는 5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대북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黃震夏 委員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진전이라든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양자회담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반드시 6자회담에 돌아오고 북핵 문제의 어떤 그런 실마리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시아지역 정상회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모두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아시아지역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큰 의의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대양주 순방, 인도네시아에서 신아시아 외교정책을 천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중앙아시아 순방, 이번에 베트남·캄보디아·태국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 강화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해 옮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 아세안과의 관계를 앞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중국도, 하토야마 정부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과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정책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차별화되는 그런 아시아 정책의 특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의 대아시아 정책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가 소위 공생하는,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해서는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또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또 인적 왕래를 통해서 좀 포괄적인 관계를 엮어 나간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黃震夏 委員 일종의, 조금 의미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맞춤형 그러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정책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희망하는 쪽으로의 관계 발전 이런 것을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맞춤형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이번에 FTA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훈 본부장 나오셨는데 지금 한미 FTA, 한·EU FTA 그다음에 한·인도 CEPA 이런 것이 동시에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은 한미 간에 타결이 됐었는데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 한미 FTA가 일단은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한·EU하고 한·인도 CEPA는 아직까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부 이런데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수 없지만 요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사정 때문에 그렇게 별로 열기라든지 우리가 비준동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강상태 비슷한 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화급한 국내 문제에 미 의회가 상당히 몰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밀려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관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늘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두 가지의 미국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다음에는 미국 의회의 관심이 국제교역 어젠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찰로 보고 또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분명히 우리 한미 간의 현안인 한미 FTA도 고려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모두 끝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위원 이춘식입니다.

장관님, 어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미주반하고 남미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들렸는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지금 플로리다하고도 합치고 또 교민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교민이 애틀랜타만 한 10만, 플로리다하고 합쳐서 20만 이런데 인원이 옛날 인원 영사 4명, 총영사 1명이라서 교민들이 범죄피해를 입고 이런데도 전혀 이것이 케어가 안 되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한번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새롭게 변화를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이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리고 미국에 보면 교민이 200만 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민들이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해당 안 돼서 제가 아는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인들이 홈리스도 요즘 하고 있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어려운 교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사 업무 중에 이런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예산이 없으니까 투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한국인 의사들 좀 해서 한번 해 보고 교회 같은 데 통해서도 한번 해 보고 또 한국에서 성공한 분들 모아서 한번 해 보고……

또 사업하다가, 조그마한 음식 가게 같은 것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미소금융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신용이 없으니까 이런 대출도 해 보고 이런 어려운 교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 문제는 물론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이런 경우는 총영사관에서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정말 미국에는 어려운 분들이 너

무 많은 것 같아요.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춘식 위원 그리고 각 공관을 돌아보면 업무보고에 대체적으로 한 줄 '한식 세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한식 세계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그 문제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아서 하시는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는 문화관광부·외교부, 관계 부처가 다 협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영사관마다 중구난방이고 또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겨우 무슨 행사할 때 한식을 한번 대접해 주는 수준인데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제대로……

예를 들면 한식도 한 끼 식사가 되고 이태리의 스파게티나 일본의 스시나 미국의 햄버거 같이 우리가 딱 내놓으면 아, 이것이 코리아 음식이다. 정말 맛있고 값싸고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김치는 식사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수산부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한식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서 표준식단 개발을 농수산식품부뿐만 아니고 관계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게 지침이 안 내려갔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일부는 내려갔습니다. 일부는 내려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단의 표준화 또 새로운 메뉴의 개발 이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공관장 회의를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국내에 와서 지인들도 만나고 국내 분위기도 알고 정보도 얻고 이러는데 비용 줄인다고 해서 지역별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실제로 보면 비용이 크게 줄지 않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금년에 원래 2월·3월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또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이것을 금년에는 좀 연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본국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아침에 국군포로·탈북자 문제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탈북자 전반에 걸쳐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제안하려다가 탈북자와 국군포로·납북자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자 전반을 할 경우에는 북한과의 알력도 있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해서 국군포로·납북자에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거야 우리 국민 보호하는 것인데 당연히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범대책기구가 필요한 것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따로따로—물론 연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활동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외교부가 자국민도 보호 못하는 대중국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고 그다음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민순 위원이 질의를 하던데 멀린 미군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일부를 중동지역으로 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검토할 때 주한미군의 일부를 뺄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협의를 하게……

○박상천 위원 동의가 아니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그래서요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사전문가들을 인터뷰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공군력 위주로 재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아프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투 병력을 보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 지상군 일부를 보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멀린 합참의장의 신문 보도는 현재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드릴 수 있고 지난번 개최된 SCM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전략적 유연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미국은 이미 GPR라고 그럴까요? 글로벌 디펜스 포스처 리뷰(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라고 해서 전 세계 해외에 있는 미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인원과 장비를 운영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 SCM에 한반도의 위기 시에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박상천 위원 우리가 아프간에 군 병력을 파병하더라도 주한 미 지상군 일부를 뺄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지금 전혀 연관이……

○박상천 위원 4만 명을 요청했는데 미국 국내 정치상 반대 세력이 많고……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이 4만 명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 결국 해외주둔 미군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주한미군이 실제 능력이 가장 적절한 수준에 와 있다, 이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참작을 해서 아프간 파병 문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 미 지상군의 일부를 뺄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아프간 파병을 한다고 그래도 전적으로 안 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에게……

1분만 더 주세요.

묻겠습니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USTR 대표가 자동차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패키지권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들어갑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협정문에 손을 대는 그런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상천 위원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비준은 연기할 수 있으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 발언을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박상천 위원 하원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문구를 원안 그대로 읽어보면 그것이 곧 재협상을 의미한다 보기는 어려우나 아주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박상천 위원 재협상이냐 아니냐의 정의가 애매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컨대 미국에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데 그 난리를 쳐서 FTA 빨리 안 한다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박상천 위원 그리고 한·EU FTA 관련해서 아직 가상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주로 축산과 낙농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고기는 우리 농민들이 거의 부업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 참작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또 유럽보다는 쇠고기 수입……

영국이 광우병 원조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사실 한·EU FTA 협정문에서 합의한 바는, 쇠고기를 그대로 수입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검역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거기

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성립이 된 이후에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박상천 위원 국제수역검역국의 기준에 따라……

그랬는데 유럽산 쇠고기가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되는 나라에서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 수역기구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상천 위원 하여튼 거기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전문인력 130명 정도가 지방재건팀, PRT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을 바그람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그람 및 인근 지역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실사단이 다시—1차 저거는 했는데—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鄭玉任 委員 그 바그람 및 인근 지역이라 하면 아프간의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이미 미국에서 PRT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PRT가 없는 지역이 한 세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여건에 가장 맞고 안전한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아직 실사단이 가서 조사를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차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2월에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고 국회에 보고도 하고 당정협의도 거치고 한 다음에 시작을……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바그람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직 PRT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그람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좀 필요할 경우에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병력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방재건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외곽경계는 누가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RT를 보내는……

○鄭玉任 委員 아프간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보내는 국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PRT 캠프의 외곽은 아프가니스탄의 군병력과 경찰이 하는 것이고 그 이선 그리고 내부 경계를 주도국 병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각 지역 담당 아프간군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 그 안의 컴파운드(compound), 가까운 외곽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鄭玉任 委員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30명의 민간 전문요원을 보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지금 보내는 지역의 안전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鄭玉任 委員 바그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바그람 및 이쪽 파르반 지역은 비교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병력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전투병은 아니나 민간 전문요원을 지방재건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병력이 파견되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 프로젝트는 유엔 주도하에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FTA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FTA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를 통과시킨 것은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낙관해서가 아닙니다. 전략 전술적으로 그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맞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협상은 분명히 없다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협상은 아니다', 그다음에 '협정 원문에 손을 대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의 수석대표를 했던 웬디 커틀러, USTR의 대표 모두 지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고기 협상 때처럼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일단은 저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鄭玉任 委員 예컨대 부속합의서 같은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지금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건너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든지 이야기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玉任 委員 웬디 커틀러 당시 수석대표가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 할 일이 더 남았고 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글쎄요, 웬디 커틀러 대표 자신이 협상이 끝난 직후에 '이것 아주 잘된 협상이다' 하고 자신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조금 더 손을 댈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우리가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협정문 밖에서 추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 한국과 EU 간의 FTA 가서명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인도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국군포로나 그 가족들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나름대로의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 그동안에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조를 잘 제공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히 수습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 또 국회의 입장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전달을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차관님에게 해외 국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귀국 후에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잘 들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의 몇 가지는, 에티오피아에 국제회의장을 건립해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신경 써 줄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한국동란 때 도와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AU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교적 6개국인가,

물론 새로 세워 가지고 아주 작은 나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6개국이기 때문에 우간다에 독립 공관을 좀 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재경관 정도는 한 사람…… 물론 북부 아프리카, 동부·서부·남부 아프리카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 각 공관에 지금 재경관이 아무도 없다면 기재부와 또 여러 관계부처와 의논해서 에티오피아에 상징적으로 재경관 한 사람쯤 우선 보내서 아프리카와 우리의 미래관계를 또 현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특히 지하자원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험지에 대한 분류가 리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리비아 같은 나라는 계산상 GDP는 1인당 1만 4000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 한국 국민으로서는 공관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환차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쿠션을 좀 충분히 만들어 놔서 우리 외교관들이 생활하는 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잔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외교력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여성 외교관, 참사관 한 분을 만났는데 아기를 외국에서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여성 외교관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출산과 관계되는 기회는 충분히, 휴직은 주도록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유 외교관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유급휴가, 무급휴직 1년, 2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다른 대체인력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이 당연히 그 정도는 수고를 해야 되듯이 정부도 그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차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장관님이 오시니까 그 뒤에 더 중요한 외교부의 관료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나누는 뜻에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제가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차 문제는 참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재부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지, 환율을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환율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특히 외교부는 외환을 쓰는 것이 거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환차, 환의 변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을 해 달라고 기재부에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화 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기재부 윤 장관이 할 수 있을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윤진식 정책실장이 기재부 출신이고 지경부장관까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윤 실장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필요하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보고를 또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저는 오늘이 지금 국감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 많은 소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아까 모 위원님은 '몸이 달았다는 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장관님도 그렇다고 했는데 몸이 달았다는 용어는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몸이 달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일의 계산된 언론 플레이에 우리 측이 지나치게 민감하고 과장되게 리액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몸이 달았다고 보는 증거는 8월 23일 조문단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표시를 했고—그게 김정일의 뜻이든 아니든—10월 16일 원자바오에게도 김정일 자신이 정확하게 남북 정상회담 희망을 미국에 알려 달라고 얘기했고 또 미국 국내부 고위직 쪽에도 북측이 거기에 파견되는 사람을 통해서, 최근 미국에 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남측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희망하지 않을 때는 책임을 돌리기 위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흘린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흘린 것도 없고 더블 플레이를 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득 위원님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김양건을 만났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0월 12일 우리 아시아 감사반이 시드니에서 오후 2시 반 비행기를 타서 싱가포르로 밤 9시 50분에 도착했고, 13일 싱가포르에서 10시 35분에 인도로 향해 출발했고 또 이상득 위원님이 한국에 돌아온 것이 10월 17일 새벽 1시 16분 아시아나 비행기로 와서 그날 오후 1시에 여의도 부근에서 국수를 먹고 18일 날 밤 비행기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다'고 기자들한테 몇 번을 얘기해 줘도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기자들이 계속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쪽에서 과장되게 계속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투명한 게 좋고 정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우리 정치 쪽에서 또 언론을 다루는 쪽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돕는 것인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게 하라',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정말 중대한 문제에는 입을 닫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정부 측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여기까지 됐다면, 정상회담 장소라든가 의제가 우리가 원하는 수순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모 위원님이 '장소가 중요하느냐? 금강산 상시 면회소는 어떠냐?' 하니까 참고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 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라는 말씀은 여러 번 했지만 '어디든지'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라는 것은 조건과 의제의 문제입니다. '어디든지'라는 것은 2001년이나 2007년처럼 북쪽에 가서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는 건데 왜 금강산 상시 면회소라고 하는데도 참고하겠다고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 가지, 송영선 위원님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몸이 달았다는 얘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았으면 제가 잘하셨다고 했을 텐데, 문제는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것은 무슨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한 것은……

○송영선 위원 아니, 아까가 아니고 오전에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방귀는 지금 계속 김정일이가 뀌고 있는데, 방귀 뀐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엉뚱한 데서 똥 싼 놈을 찾는다고 난리거든요. 똥은 엑스로 표시해 주세요.

(웃음)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한일 관계가 겉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동아시아공동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것 대동아공영권하고 너무 냄새가 진하고 비슷합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중국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장악을 혹은 중

국이 지나치게 앞장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두리를 만드는 게 동아시아공영권입니다. 대동아공영권입니다. 동아시아공동체, 일본이 리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던져 놓는 겁니다. 거기에 덩달아 우리가 지금 실체도 없는 것과…… 옛날에도 이렇게 해 보고 또 언제 했는지 압니까? 95년에 그랜드플랜이라고 일본의 비밀 그룹들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막 띄웠습니다. 결국 주저앉았지요.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하토야마 정권이 지금 54년 만에 집권을 하고 난 뒤에 크게 내건 게 '미일 동맹보다는 아시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역외 이전도 가능하다', 2006년 자민당이 해 놓은 것을 뒤집어 얘기하는데 저는 이 가능성이 정말 있다면 일본은 해상교통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또 '주일미군 행정협정 개정한다'…… 이것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 바로 한국의 SOFA 개정, 미선·효순 사건 또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간에 일본은 미·일동맹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칫 또 국내 정치용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것을 저보다 전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의 외교 방향을 흔들림이 없이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제 차례예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문학진 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북한이 결국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쟤네들이 얘기하는 다자대화, 3자회담이든 아니면 4자회담이든 그것이 전부 다 협상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부시 행정부에서도 CVID라고 해 가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07년 2·13 합의로 갑자기 북핵 불능화 개념이 들어왔고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핵 폐기 없는 한북·미 간 정상화는 없다, 또 북핵 폐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순간에 또 미국이 북한의 어떤 전략이나 요구에 말려들어서 후퇴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미국 측 인사들하고 만날 때 항상 북핵의 완전한 폐기, 요즘은 CVID라는 말보다 CID라는 말을 미국 측 인사들이 많이 합니다. 컴플리트(Complete)하고 이리버서블 디스맨틀먼트(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게끔 노력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요. 결국 이번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보면 '대한민국의 세계평화를 위한 군사적 기여 확대'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 지원도 하시고, 또 PRT를 증가하는 지원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윤상현 위원 재정적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고요. 아프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프간 정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일단 우리의 재정적 지원이 1억 달러 정도인데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지원액이 한 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0.2%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바그람지역에 PRT를 증강한다, 또 그 PRT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나 군 병력을 보낸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PRT는 일단 프러빈셜 리컨스트럭션 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재건팀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의료지원팀이 들어가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태권도 교관도 들어가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안에 다…… 지방 재건을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총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의료지원이라든가……

○윤상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전 세계 미군의 병력을 한반도에 증강해서 배치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전략적 유연성, 스트러티직 플렉서빌러티(strategic flexibility)가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너희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모든 병력을 해서 도와줄 테니까 결국 아프간에 주한미군을 아무 때나 미국이 원하는 때에 빼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총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이, 지금 6만 3000명의 미군 병력이 있습니다마는 4만 명의 증파 요청을 했고 미국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만 명 증파 요청이 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붙박이 주한미군을 빼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CM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이 엡설루틀리(absolutely)라는 말, '절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2012년 4월 17일까지 북핵 폐기에 있어서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를 해야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한미 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확정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작권 전환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반도 사정을 리뷰하고 그것을 참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뷰 과정의 일환으로 계속 검토를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매년 하는데요, 북한이 올해 5월 25일에 2차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또 2006년도 10월 9일인가에 1차 핵실험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1990년대 초 상황보다, 1차 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1차 핵위기 때 그 바로 전 91년, 92년도에 주한미군 7000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93년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려다가 결국은 1차 핵위기 때문에 백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 측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가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미 간 군사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생일을 맞이한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감사하긴 한데 오늘 양력이고 우리는 음력으로 새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장소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만나서 할 용의가 있다' 이것 아니에요? 장관님,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대단히 나쁜 편은 아니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

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문학진 위원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괘념하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독일의 경우를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할 때 기차 타고 동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역인 에어푸르트역에서 양독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독 수상은 또 기차 타고 서쪽으로 넘어와서—이것도 첫 번째 역인 모양입니다—카셀역에서 양독정상회담을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의 견해인데 장소와 관련해서 도라산에서 한 번 하고 개성공단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 번째로 또 평양에 가는 게 자존심이 정 상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매일 것은 없다는 생각이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건설적인 안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님께 한미FTA 간단히 하나 여쭤 보지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 수정이나 추가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지금 있지요? 있다고 봐야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지금 현재로서 추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웬디 커틀러가 그때 본부장님 파트너였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지요? TV에 같이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이 웬디 커틀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어떤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최근에 미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그럴까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러한 내용이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절한 단계는……

○문학진 위원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냥 미국이 추가 요구, 수정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만 일변도로 나가다가 만약에 추가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 의견이 계시다면 제가 적절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하여튼 검토하고 참고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베트남이 대통령 국빈 방문 거부한다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월남전쟁 그 문구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학진 위원 거의 그 수준으로 난리를 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당일치기로 베트남 갔다 오시고 그랬잖아요.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때 보면 외교통상부 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직무태만이고 늑장 대처 아니었어요?

보훈처에도 공문 보냈는데 그 공문 우리 방에서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니까 '그 공문이 국가간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외교부에서 우리 방으로 답변이.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훈처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요. 외교통상부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서를 보훈처에다 보냈느냐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신각수 차관한테 이 자료 보라고 줬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월남전쟁의 '월'자도 없어요, 외교통상부 의견서에. 외교통상부,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월남전쟁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계되는 직무의 범위에 국외 위난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전부예요. 베트남의 '베'자도 없고 월남의 '월'자도 없고 전쟁의 '전'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외교통상부가 대처를 했다고. 그래 놓고 베트남 정부가 난리를 치니까 우리 장관님이 무지무

지하게 바빴던 것 아니에요, 신문에 열심히 쓰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검토서 같지도 않은 검토서를 입법예고 기간 지난 다음에 외교부가 보훈처에 보냈다고요.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장관만 바빠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하게 경위 파악해 가지고 진상규명하고 책임 지울 것은 지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문 위원님께 경위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내가 신각수 차관한테 외교통상부가 보훈처에 보낸 의견서 하나 드렸는데 장관님한테도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아프간 파병 관련해서 PRT를 바그람기지 주변으로 해서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黃震夏 委員 150명 수준으로 해서 검토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무슨……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맥시멈 130명 정도 될 것입니다.

○黃震夏 委員 외통부장관께서 파견 병력에 대한 조직 같은 것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기왕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프간사태가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봐도 그렇고 그게 PRT의 임무를 가지고 가서 재건사업에 종사한다…… 이게 비전투의 임무를 띠고 가지만 최소한의 경계병력이 아니라 최대한의 경계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국방부하고 협조하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 이유는 자꾸 병력 파견하는데 대해서 국민의 걱정이 있고 국회에서도 반대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병력, 최소한의 경비병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경비병력이 붙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아프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재건팀이 가더라도 거기에 있어서의 민사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사작전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이툰부대가 가서도 그랬고 옛날에 동티모르에 갔었던 상록수부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사작전은 그곳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을 양성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습득하고 또 무슨 농기구 같은 것 고쳐 주기도 하고 미용 기술 이렇게 해 주고 태권도 교육시키고 이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현지민하고 친숙해지는 것이 우리 병력이라든지 우리의 건설요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사작전 하는데 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병력이 좀 여유 있게 가서 그 사람들이 태권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기술교육도 시키고 민사작전도 철저하게 수행을 할 때 안전이 담보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의 경비병력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유념을 해 주셔야 할 것은 미국 측에서 한국은 상당히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얘기도 했고 또 한국은 아프간에 병력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 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때는 재정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병력 지원입니다. 미국도 말은 안 하지만 병력 지원을 내심 엄청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PRT를 보낸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담보하려면 경비병력을 최대한 파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님은 경험이 그 분야에 있으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간사,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黃震夏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난 9월 달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일본 참의원과 케빈 마허 국무부 일본과장하고 주일미군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격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또 일본은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인도양 급유 지원을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존스홉킨스대의 켄트 칼더 교수 같은 분은 미일 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께서도 조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일본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서 또 한반도 안보 상황에는 엄청난 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일 관계가 지금 불협화음이 자꾸 나오는데 주일 대사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불협화음이 계속 날 걸로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여전히 미일 동맹관계는 견고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주일 미군기지의 개편, 특히 후텐마 공군기지의 이전 문제는 한반도의 안전·안보 또 주한미군의 운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텐마의 기지이전 문제는 일본 국내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한 13년에 걸쳐서 그것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한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토야마 수상 자신도 미국과의 관계가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 진전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취해야 될 정책적인 고려 사항을 심층 검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왔다 갔다 큰일 하시느라고. 그냥 월남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오전에 제가 정상외교에 대한 질의를 좀 했는데 장관께서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시고 계시면서 그러시는 건지 정말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외교에 대한 이런 갑론을박들이 정상외교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이런 건 이렇게 됐다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 아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신문에는 일절 그런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장관님 보시는 신문에는 그런 게 났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그게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신문에 난 걸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신문을 봤다는 뜻이지 제가 알고 그렇게……

○구상찬 위원 신문에 안 난 얘기 제가 물어볼게요.

복수의 목사님들이 정상외교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신문에 안 난 얘기인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복수의 목사님들이 정상외교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다른 질문 할게요.

한미 간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핵확장 억지력 제공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내년 2월에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하도록 협의했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자, 23일에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또 내각 기관지인 노동

신문, 민주조선이 난리가 났습니다. 21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평화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의 뜻을 표하고 또 장관이 안 계실 때 제가 차관께도 높은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굳건한 의지로 북한에 머리 숙여서 다가가는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정부가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외무부와 국방부의 협상력을 높게 평가를 다시 한번 하는 바입니다.

다만 41차 SCM, 즉 한미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미국 정부와 기존 내용대로 합의했다는 데 조금 저는 불만이 더 있습니다. 협상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무슨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제가 말씀……

○구상찬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답변을 같이 한꺼번에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서 한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질문 다 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구상찬 위원 그때 답변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외교부의 산하단체 중에 문제가 있는 단체를 지적하면서 장관께서도 '그건 제가 감사원 감사라도 시켜서 잘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제가 여기 그런 비슷한,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라는 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게 처음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계실 때는 아주 좋은 단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주한미군으로부터 '좋은이웃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4500만의 사업 예산을 받아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이 김 모씨로 바뀌고 나서 외교통상부 법인 인가증과 또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감사편지 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주한미군의 행사 승인서를 복사해 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방부에도 보고가 되어서 내사 중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미국 국방부에서도 내사 중이랍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또 미국 국방부 내에서 이걸 한국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이것을 방치했다는 불만도 사실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민사회에서도 주한미군용사 부모님 초청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 행각을 펼쳐서 미주 교민사회도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대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외교부가 인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통상부에 속해 있는 이런 인가 법인들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무려 법인이 410곳 또 민간단체 등록된 게 94개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외교부에서 인가만 내 주지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숫자상으로 500개가 넘는 민간단체를 담당 서기관 한 분이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최초에 신고한 활동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전혀 외교부에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든지. 주한미군에 있는 높은 친구들에게 이런 단체들이 공식행사 참여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먼저 각 정부 부처에서 인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접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가해 준 것을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 접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사기 행각을 펼치고 다니면서 샤프 사령관 그다음에 스티븐스 대사, 무슨 경찰청장 사진 들고 다니면서 피해를 입히는 단체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산하단체 관리를 장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1분만 더 주십시오.

외교부에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초기에도 국제교류재단의 산하단체도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장관께서 인정하시면서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단체들도 외교부가 외교만 하지 말고 이런 단체의 감시 기능도 정부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정보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이나 각국 대사관에서 요청할 때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재 방안이 없다면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도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것과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 문제, 사실 존경하는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500여…… 대개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신청할 때 구비서류, 서류 심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의 대여섯 명 또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외교부 감독 이전에 NGO들의 하나의 양심, 양식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민법·형법상의 차원에서 이걸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교부가 효과적으로 등록단체를 관할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아까 질문 2개 드렸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전작권 문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방부하고 매년 SCM뿐만 아니고 중간 단계의 여러 가지 SPI 회의 등 해서 항상 쭉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검토를 하고 리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작권 문제에도 반영이 되는데 현재로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외교부가 이것을 개정하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우선 국방부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야 되고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외교부가 정식으로 미 국무부에 제시를 하는 이런 절차인데 현재 국방부와 외교부 간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 특히 북한이 2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한반도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가면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 위원님.

1차 보충질의가 끝났고요, 2차 보충질의 송영선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왜 중요하냐? 만나는 게 중요하지' 하는 그런 정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렵게 만나는 만큼 실익 없는 만남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까 이 대통령님의 말씀, 2008년 2월 25일, 4월 8일, 4월 29일, 10월 10일, 2009년 8월 15일 이런 자료 때문만이 아니라 2001년과 2007년과 같은 그런, 평양에 가는 자존심 문제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실익 문제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오면 김정일 위원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구름 잡는, 뭐 '양치질하는 수준', 수억을 들여 가지고 국정원 나뒀는데 기껏해야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수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어디 한마디를 들어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때까지 흘러왔던 남남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가까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의 친북이 진짜 허상인지 실상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동시에 이득을 취하자는 차원에서 남쪽이지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 황희 정승님처럼 판문점도 좋다, 금강산도 좋다, 다 건설적인 견해로 고민하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득이, 더 장사가 되는 쪽을 확고하게 좀 생각하시고 이쪽이 더 좋은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 이미 차관님께 내가 굉장히 절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반 감사반으로서 인도에 갔었습니다. 인구 14억 인도가 지금 그들의 발전량의 2.8%만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현재 원전을 17기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한 25~30기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도 중수로가 아닌 경수로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가압경수로로서는, 특히 우리 APR1400 모델은 진짜 우리가 저번에 북쪽에

하면서도 실험을 해 봤지만 경수로로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약 40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프랑스나 미국이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들어 가지고 MOU를 다 체결했습니다. 우리 한전도 인도 원자력공사 NPCIL하고 같이 8월 27일에 공동 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원전 사업은 국가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에 MOU를 체결한 한전이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계획은 내년 1월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EPA를 올해 말까지 하려고 외교통상부가 그렇게 적극적이라면, 저는 심지어 대사관에 CEPA 이전에 이것 하라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 어려우면 원자력협력협정은 제가 원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장 빠른 시간에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고, 또한 지금 이미 협력협정문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인도 원전 부지를 배정받는 조항을 협상 내용에, 협정 내용에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 제가 6월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 외무장관, 통상장관, 수상을 만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국 간에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가능한 한 조속히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정감사 종합점검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구상찬 위원, 신낙균 위원, 김충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송영선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안되었던 문제들과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가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구상찬	권영세	김충환	문학진
박상천	박선영	박주선	박 진
송민순	송영선	신낙균	윤상현
이범관	이춘식	정동영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진 영	홍정욱
황진하			

○청가 위원(2인)

남경필 정몽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영호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1차관	권종락
외교안보연구원장	이순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차관보	이용준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다자외교조약실장	오 준
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이혜민
대변인	문태영
에너지자원대사	조 현
재외동포영사대사	이준규
동북아시아국장	조태영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최종문
북미국장	장호진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진수
국제기구국장	신동익
정책기획국장	이 윤
개발협력국장	설경훈

문화외교국장	조 대 식
재외동포영사국장	이 정 관
다자통상국장	김 기 환
지역통상국장	안 총 기
국제경제국장	권 해 룡
FTA정책국장	이 태 호
FTA교섭국장	김 해 용
교수부장	조 정 원
북핵외교기획단장	황 준 국
부대변인	최 종 현
인사기획관	장 원 삼
경력교수	원 종 찬
경력교수	추 규 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9. 9. 25 김충환·김옥이·송민순·공성진·김용구·김영진·강명순·김장수·신상진·이계진·이경재·김창수·이한성·강석호·이종구·안효대·이해봉·임동규·권영세·정진석 의원 발의)

임진강 수해 참사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 및 남북관계발전 촉구 결의안

(2009. 9. 25 문학진·강창일·김동철·김영록·김진표·노영민·박상천·박주선·송민순·신낙균·안규백·우제창·원혜영·이미경·이석현·장세환·전현희·정동영·조정식·주승용·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8일 회부됨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2009. 9. 29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문국현·박진·박상천·변웅전·신낙균·윤상현·이재선·이춘식·임영호·정의화·정진석·진영 의원 발의)

9월 30일 회부됨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09. 10. 1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1일 회부됨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0. 6 박주선·김동철·김영진·전병헌·김재균·이미경·전혜숙·이윤석·김우남·안규백·최영희·신학용·송민순 의원 발의)

10월 7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6 윤상현·강석호·강용석·구상찬·권경석·권영진·김금래·김동성·김선동·김성회·김영우·김옥이·김을동·김재윤·김정권·김정훈·김창수·김충환·김태원·김태환·김효재·나경원·박보환·박순자·박준선·서병수·성윤환·손범규·심재철·안경률·안형환·원희목·유일호·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철우·이춘식·이한성·장광근·정두언·정병국·정옥임·정진석·정해걸·조전혁·조진형·주광덕·진성호·진수희·차명진·최구식·허원제·현경병·현기환·황진하 의원 발의)

10월 19일 회부됨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09. 10. 26 의장으로부터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의원께서 퇴직으로 궐원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